



양계안테나

홍보팀

D/B구축사업 양계협회 관리기관 지정 프로그램 개발 등 가속화

지난 4월부터 농림부 자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구축사업의 지정관리 기관으로 대한양계협회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종계 D/B구축사업은 종계의 입식 변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4월 농림부로부터 D/B구축사업이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10~11월에는 이미 양계협회, 계육협회, 농협의 협조하에 전국 200여 농가에 달하는 종계장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한양계협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게 되면서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양계협회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관리를 맡게 되는데 원종계 3사에서 분양하는 종계마리수와 도태실적을 주별로 파악하게 되고 계군별로 입식에서 도태에 이르기까지 평균 4회 이상 종계장을 방문하여 사육현황 파악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한 종계장 실태조사에서 전체 600만수로 추정되는 사육수수 중 200만수만이 집계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정확한 수수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우선 원종계 3사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03년 1월부터 분양된 농장과 마리수를 정확히 파악키로 하는 등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등록제와 연계해 무등록 종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 차후 무등록 종계장에는 분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제조치도 따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D/B구축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종계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D/B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입식조절, 노계도태 등 관련업계 합의사항 및 정부 또는 수급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D/B추진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제반 사업추진시 배제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추진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이 있

어야 할 것이다.

양계업 등록, 양계농가 57% 등록 9월까지 조기 마감 방침

지금부터 30년전 양계업의 수수가 늘어나고 닭고기 계란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부화장 허가제와 종계장등록제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 1977년 9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당시 양계 앞날을 우려하는 양계인들은 수급조절, 위생방역 문제, 국민보건 등의 거시적인 앞날을 위해 허가제와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제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1985년부터는 산란계 3만수 이상, 육계 1만수 이상에 대해서도 등록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종계 1천수 이상)을 사육하는 양계장은 등록을 부화장은 허가를 필해야 할 정도로 양계산업이 큰 성장을 해왔다. 물론 산란계 중추농장도 1995년부터는 3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중추농장까지 등록을 필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9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화업과 종계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든 축종에 대해 등록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자유로운 축산업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회는 물론 앞날을 걱정하는 관련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계질병 특히, 불법 병아리인 백세미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질병을 조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해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2002년 12월 26일 축산법을 개정하고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닭의 경우 300㎡)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장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계인들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물론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양계인들이 혼란을 겪거나 법을 잘 지키는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현재 양계업을 포함한 축산업의 등록현황이 57.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참여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앞으로 9월까지 모든 축종에 대해 등록을 마무리 짓고 이때까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을 통해 등록시한인 오는 12월 26일까지는 100%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등록제가 다시 부활되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양계업 안정은 물론 질병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등록제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등록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 직불제와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보며, 이번 기

회에 종계 D/B구축과 연계하여 양계업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계약사육 농가들의 당면연안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급

계열업체에 대한 육계 계열농가의 사육수수료 인상요구가 구체화되고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불만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사육농가들은 지난달 농림부를 방문, 농가들의 어려움과 계열업체들의 횡포 등에 대해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초 H계열사 계약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육계계열농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각 지역에서 협의체 구성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남 나주에서 전국육계계열농가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육계(삼계, 토종닭)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날 참여 농가들은 표준계약서 사용, 계열사 위탁수수료 현실적용, 불량병아리 및 질병 퇴치 방안 모색, 계약농가보호법 국회제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단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함께 고통을 감내해오던 사육가들이 장기간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나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열사들은 사육회전수 감소, 계약사육 평가방식 변경, 수수료 인상 동결, 사료요구율 하향조정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해오고 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2년 동안 변화된 계열사들의 계약서에는 사육비의 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료요구율이 1.96에서 1.83으로 0.13이 낮아지면서 농가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계열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리점제를 활성화시켜 농가와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려는 방법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시세변동에 따른 보너스 조항 등 일부 조정된 사항은 있지만 미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과거에는 앞에 나서 불만을 토로하는 양계인들에게는 입추를 지연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나서지를 못하였으나 이번과 같은 집단 움직임은 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입장을 반증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태가 심화되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육수수료 인상 등 시정조치 움직임이 일면서 곧 계열업체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업체와 농가들간의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계열업체에서는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양계**